

## 【 국내금융 뉴스 】

### 시민단체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해결 주장

□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마련과 관련한 경쟁적 대안이 다양하게 제기됨.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6조 2천억원)와 기업주(3조 6천억원)의 추가부담과 국고지원금(2조 7천억원)을 더하여 마련한 추가 재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는 주장과는 달리 노인의료비의 정부 지원 증가 등과 같은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
- 한편, ‘의료 민영화 추진 반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상위 1000대 기업에 한해 건강보험 연대부담금을 0.2%씩 거두는 기업의 책임 확대 방안을 제시
- 정치권에서도 정부 지원금 확대, 사후정산제 도입, 보험료 부과 기반 정비를 통해 ‘무상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움직임이 나타남.

□ 하지만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 하자는 주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됨.

- 일정부문의 보험료 인상, 기업과 정부의 추가 재정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의료비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며 보장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단일보험체제에 대한 집중 강화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민간보험업계와 현행 행위수가제를 궁극적으로 총액계약 제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의료계의 반발이 존재
-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차기 대선까지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선거공약 혹은 표심 확보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보건당국은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단순 수치를 통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측면에서 아직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현실성에 의문을 표시함.

(시민단체 건보 하나로 병원비 해결하자 등, 경향신문 등, 1/11)